

韓國 大學의 成長過程

—自律과 統制의 視角에서—

金 泳 謨

(中央大 社會事業學科 教授)

I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大學生은 엄청나게 증가되어 4年制大學만 하더라도 1983년 현재 약 606,000여 명이 되었다.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大學進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再修生 또는 낙오자들이 대학진학자에 비하여 3배 이상이나 된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大學(大學教育)이 발전할 수 있는 社會的 條件은 매우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大學生의 증가율은 지난 20여년간 經濟開發을 중심으로 한 祖國 近代化作業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당시의 卒業生들이 近代化運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원래 西歐에서는 近代化 즉 資本主義의 發展과 그 지도자적 역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大學을 설립하였다. 大學은 근대사회 즉 市民社會의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近代의 大學精神은 市民精神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University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의 大學精神은 普遍主義(Universalism)라고 말할 수 있다. 서구의 보편주의는 自由, 平等, 友愛, 民主主義 등의 사회적 가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봉건주의 내부에서 새로

이 형성된 社會階層 즉 부르즈와지의 것이었다. 이들이 자국의 市民革命을 주도하였고 따라서 영주 및 귀족과 같은 封建支配階級으로부터 억눌렸던 자유, 평등, 우애, 민주주의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것을 되찾으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근대 시민계급인 부르즈와지가 자기들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大學教育機關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기본적 理念은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西歐의 普遍主義인 市民精神이고 이것이 서구의 大學精神이었다.

우리나라 大學은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指導者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大學教育은 주로 美國의 영향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大學教育은 義務教育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돈이 있는 中産階의 자녀들이 教育機會를 획득하게 되었고 中産층의 사회적·경제적 성격이 大學精神을 형성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大學精神은 教育法 第1條에 나타난 바와 같이 弘益人間이었다. 그러나 弘益人間이란 것이 과연 教育理念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비록 우리나라 건국초에 있어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부르즈와지가 정치적, 사회적 세력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市民精神이 대학의 이념으로 발양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美國의 영향으로 서구적 시민정신이 大學理念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즉 自由, 平等, 友愛, 民主主義가 그 핵심적 가치였다.

II

이러한 市民的 價値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사회적, 정치적 갈등으로 표현된 것이 1960년의 4月革命이라 볼 수 있다. 1960년까지만 하여도 大學에 설치된 學科는 대개 관념적인 순수 학문이 主流를 형성하였고, 그 이후의 경우는 실용적인 응용과학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의 경우는 거의 3분의 2가 응용학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大學教育이 專門職業化되어 가고 있다. 전문직업화된다는 것은 종래에 볼 수 있었던 관념적인 大學精神의 구현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중요시하고 脫理念的인 學風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대 이전에 볼 수 있었던 大學生의 浪漫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個人主義的, 實用主義的 性向이 대학에 만연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大學教育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러한 변화의 핵심은 大學教育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介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나타난 것은 4月學生革命을 비롯한 大學生의 政治的 參與이다. 이러한 참여가 사회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學生으로 하여금 학업에 전념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大學이 牛骨塔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量的 膨脹만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學園企業化를 예방하고 國家社會發展을 위한 大學教育計劃의 일환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사실 1960년 이전에는 大學教育이 自由放任的 狀態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정부의 강력한 介入과 統制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는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大學의 自治力의 결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전

자의 경우는 대개 우리가 南北對峙下에 있기 때문에 政治不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서 찾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大學自治能力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사실 大學生의 데모는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주요한 이슈는 學園外的 要因에 대한 불만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大學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學園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教授 또는 學生의 自治的인 組織이 거의 없거나 自發的 機能이 약화된 것이 있을 뿐이다.

III

大學이 憲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의 自主性과 專門性 및 政治的 中立性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규제적인 힘이 있는 自治組織(教授會 또는 學生會)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1960년 이후, 특히 10月維新 이후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앞서 지적한 자치적인 조직이 大學內에 발달하게 되면 學內의 非理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고 건전한 양심적인 비판세력이 형성된다. 이러한 것이 없게 되면 學內 行政뿐만 아니라 大學行政 자체가 實效를 거두기 어렵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무엇보다도 大學內에 자기규제적인 힘이 있는 메카니즘을 형성시켜야 되겠고, 이러한 힘과 조직에 의하여 大學의 自律이 존재하여야 될 것 같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학에 대한 統制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自律과 統制는 사회질서에 있어서 상호배타적 개념이면서도 상호보완적 개념이다. 하나의 힘이 약할 때 그것을 미치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질서의 불가피한 形成理論이다.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勞使葛藤과 같이 상호배타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대학사회에 있어서는 協力·合意에 의한 사회질서가 형성된다. 따라서 외부의 統制에 의한 大學秩序의 형성보다는 가능한 自律性에 의하여 大學社會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大學社會는 대단히 保守的이라서 自律性에 기초한 大學發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해지고 마침내 정부에 의한 大學改革마저 시도되게 된다. 그 좋은 예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大學의 入試制度和 實驗大學 및 學徒護國團, 學生課外 금지 등이다. 정부가 大學教育行政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大學教育에 多元性和 創意性이 약해지고 획일화되기 쉽다. 우리나라에 국가에비고사에 의한 大學入試制度和 實驗大學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정착되지 못하고 실험단계에 있다는 일부의 비난을 듣게 되는 현상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가에비고사에 의한 大學入試制度는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非教育的인 獎學制度를 양산하고 있다. 대학에 설치된 수많은 學科의 균형적 발전이나 사회적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人氣學科의 발전만을 도모하여 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의 學科는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專門職業分野이다. 사회가 전문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專門職에 유능한 인재가 종사하여야 되는데, 대학의 獎學政策만 하여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전문직간의 격차를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政府의 개입 또는 통제가 부득이 요구될 수도 있다.

IV

오늘날의 大學精神을 西歐의 근세 초기에 볼 수 있었던 市民精神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비하여 大學教育이 대중화되어 가고 專門

職業化되어 왔기 때문에 고고한 대학정신은 찾아보기 어렵고 실용적인 전문직업화가 발달하게 된다. 비록 대학교육이 전문직업화된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理論(大學)과 實際(社會)간의 괴리 때문에 大學教育이 덜 世俗化되어 있다. 大學이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히려 教授들은 상아탑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졸업생들은 大學 본연의 학문탐구와 사회로부터의 역할기대간의 갈등에 놓이게 되어 결국 사회기관에서 再教育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大學教育은 막대한 낭비성을 지니게 되며 자연히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비록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건 정부가 개입할지라도 大學의 自律性을 살리기 위한 大學改革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大學教育에 있어서 自律性의 保障과 최소한의 統制性이 병존되어야 함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간 大學教育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의 측면이 과연 적절히 이루어져 왔고, 또 자율화될 수 있을 정도로 大學의 自治力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하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국가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大學教育의 統制性이 불가피하게 강조되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大學教育의 自律性이 보다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오늘의 우리나라 大學의 發展과 改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두 입장이 조화롭게 摸索·體系化되어야 할 것이다. *